



【검토보고서】

2015. 07. 10(금)
제 259 회 정례회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문위원 전태언】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과

- 제안자 : 양주시장(사회복지과)
- 제출일 : 2015년 6월 16일
- 검토일 : 2015년 6월 18일

2. 제안이유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동일 수준으로 지급하고자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고자 함.
-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보훈명예수당의 지급기준을 월 4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함.
(안 제8조제1항제1호)
- 수당의 수급권자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신설(안 제8조)

4. 검토의견

가. 법령검토

- 본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자치조례이며
- 개정안에서는 법령의 취지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관계 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나. 정책 및 내용검토

- 개정안에서는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을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하였으며 이는 경기북부 인근 시군의 수당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한 사항임.

시군명	지급연령	거주제한	지급액 (월)	수령인원 (명)	향후 계획
양주시	65세	3개월	40,000	1,650	
가평군	제한무	제한무	50,000	215 (참전만)	- 참전 : 50,000원 - 보훈 : 30,000원
고양시	65세	제한무	50,000	8,000	- 참전(80세이상) : 50,000원 - 참전(80세미만), 보훈 : 30,000원
구리시	제한무	제한무	50,000	1,600	2011년 1월 인상
남양주시	제한무	제한무	50,000	5,060	2015년 1월 인상
동두천시	65세	1개월	50,000	1,100	2015년 7월부터 인상
양평군	제한무	제한무	50,000	2,063	2013년 6월 인상
연천군	65세	제한무	50,000	780	2013년 7월 인상
의정부시	65세	3개월	40,000	3,900	2016년 1월부터 80세 이상만 5만원 지급
파주시	65세	제한무	50,000	3,700	2014년 1월 인상
포천시	65세	제한무	50,000	2,970	- 참전 : 5만원 - 보훈 : 3만원

- 안 제8조에서는 보훈명예수당의 지급범위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의 조항을 추가하였으나 실제 대상자의 범위 증감은 없으며

- 현행 제8조제2항1호에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받는 사람의 조항이 국가유공자 단체회원에게만 지원된다는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여 추가한 사항임.
- 그 외 사항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법령명 변경, 띄어쓰기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 재정검토

- 보훈수당이 4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인상될 경우 2019년까지 소요예산액은 14억2천만원에서 17억8천만원으로 약3억6천만원의 예산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 2015년 예산액은 옥정지구 입주 등으로 수급권자의 증가분을 반영하였을 때 9억6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현재 예산액 7억9천만원에서 약2억원 이상의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함.

※ 수당 인상시 연도별 소요 예산액 추이

구 분	지급대상(만65세 이상)				
연 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지급대상자수	2,000	2,240	2,480	2,720	2,960
인구수	250,000	280,000	310,000	340,000	370,000
예산소요액 (천원)	962,000	1,344,000	1,488,000	1,632,000	1,776,000

※ 인구수는 양주시2020장기발전 계획상 인구추계를 적용하였으며
지급대상자는 현 인구수 대비 지급대상 비율 0.8%를 적용함(2015년 7월 인상시)

라. 형식검토

- 본 조례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 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음.

마. 절차검토

-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의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음.